



전라북도 복지정책, 사업의 간소화와 재정의 효율화 병행해야



연구진 이중섭 부연구위원 welfare73@jd.re.kr
연구진 박신규 부연구위원 ko892ws@jd.re.kr

- Chapter 1 |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 현황
- Chapter 2 |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 Chapter 3 | 전라북도 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
- Chapter 4 | 결 론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3월 14일 vol.32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라북도 복지정책, 사업의 간소화와 재정의 효율화 병행해야

Contents

Chapter 1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 현황	
	1.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 전년대비 1.5% 증가	3
Chapter 2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불균형	5
	2. 복지재정의 증가와 지방세수의 감소	7
Chapter 3	전라북도 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	
	1.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개선을 위한 지역간 연대	8
	2. 아동청소년 및 중고령층 중심 탈빈곤정책 확대	9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투명화와 간소화	10
Chapter 4	결 론	11

Chapter 1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 현황

1.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 전년대비 1.5% 증가

▶ 전라북도의 2011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예산인 1,222,098백만원보다도 18,070백만원(전년대비 +1.48%)이 증가한 1,240,16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3,801,451백만원의 36.2%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과 749,715백만원(전년도 대비 1.72% 증가), 여성청소년과 236,462백만원(전년도 대비 2.06% 증가), 노인복지과 253,991백만원(전년도 대비 0.24% 증가)

〈표-1〉 2011년도 전라북도 조직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1년	2010년	증감액	증감율
사회복지과	749,715	737,024	+12,691	+1.72
여성청소년과	236,462	231,696	+4,766	+2.06
노인복지과	253,991	253,378	+613	+0.24
전체	1,240,168	1,222,098	+18,070	+1.48

자료 : 전라북도 2011년 세입세출예산서 재분석(노동예산은 제외)

▶ 전라북도의 2011년 사회복지재정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951,675백만원(7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비가 234,853백만원(19.7%) 그리고 나머지 분권교부세, 기금 등의 순위로 나타남.

- 도비부담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저소득층 복지사업(83,429백만원), 보육정책(42,566백만원), 노인복지(29,033백만원), 장애인복지(18,413백만원), 아동복지(16,525백만원) 등임.

〈표-2〉 2011년도 전라북도 재원 및 분야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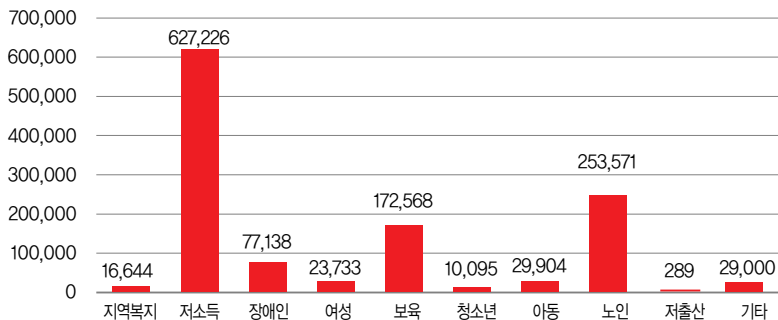
	지역 복지	저소득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보육 정책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저출산	기타 (행정경비)	전체
전체	16,644 (100.0)	627,226 (100.0)	77,138 (100.0)	23,733 (100.0)	172,568 (100.0)	10,095 (100.0)	29,904 (100.0)	253,571 (100.0)	289 (100.0)	29,000 (100.0)	1,240,168 (100.0)
국비	8,319 (50.0)	543,797 (85.7)	43,566 (56.5)	5,673 (23.9)	130,002 (75.3)	1,275 (12.6)	11,556 (38.6)	207,437 (81.8)	50 (17.3)	-	951,675 (76.7)
분권 교부세	3,519 (21.1)	-	15,159 (19.7)	468 (2.0)	-	429 (4.2)	598 (2.0)	16,946 (6.7)	-	-	37,119 (3.0)
기금	-	-	-	8,718 (36.7)	-	1,755 (17.4)	-	155 (0.1)	-	-	10,628 (0.9)
광특 회계	-	-	-	-	-	4,668 (46.2)	1,225 (4.1)	-	-	-	5,893 (0.5)
도비	4,806 (28.9)	83,429 (13.3)	18,413 (23.8)	8,874 (37.4)	42,566 (24.7)	1,968 (19.5)	16,525 (55.2)	29,033 (11.4)	239 (82.7)	29,000 (100.0)	234,853 (19.7%)

자료 : 전라북도 2011년 세입세출예산서 재분석

▶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전라북도의 도비 부담액 234,853백만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 816,563백만원의 28.9%를 차지하고 있음.

- 예산총액 기준 분야별 사회복지예산에서는 저소득 복지예산이 627,226백만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5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예산이 253,571백만원(20.4%) 그리고 보육정책예산이 172,568백만원(10.3%) 등의 순으로 편성됨.

〈그림-1〉 분야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주: 단위는 백만원임.

▶ 한편, 전라북도의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73,109백만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1,240,168백만원의 5.89%이고, 사회복지사업의 전체 도비 부담액인 234,853백만원의 31.2%에 해당함.

▶ 결국,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도비 부담액 중 자체사업에 투자된 도비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비 161,744백만원은 중앙정부의 의무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의 대응투자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표-3〉 2011년도 전라북도 자체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체사업내용	자체사업예산	전체예산
지역복지	참여형 사회복지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평가, 단위사업추진경비, 복지콜센터설치운영, 민간사회복지지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 노숙인쉼터운영, 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보훈시설확충, 보훈단체지원	16,643(99.99)	16,644(100.0%)
빈곤	저소득층 자녀교육지원, 단위사업기본경비, 자활사업지원	495(0.08)	627,226(100.0%)
장애인 복지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재활 및 사회참여사업, 장애인편의증진사업	5,134(6.66%)	77,138(100.0%)
여성복지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양성평등사업지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취약여성특별지원, 은심미동심 순회서비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양립지원,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인권보호	1,893(7.97%)	23,733(100.0%)
보육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파견, 보육정책 운영관리, 단위업무 추진 기본경비, 보육시설 한마음대회, 다문화매직사업	417(0.24%)	172,568(100.0%)
청소년 복지	청소년육성사업지원, 전라북도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청소년보호활동지원	541(5.36%)	10,095(100.0%)
아동복지	실종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입양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추진경비, 아동행사지원, 아동권익 증진사업, 아동급식지원	10,942(36.59%)	29,904(100.0%)
노인복지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활성화 사업지원, 노인회 사회적 일자리사업, 노인 사회참여확대지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추진경비,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노인건강진단, 무료급식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관 지원,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7,739(3.05%)	253,571(100.0%)
저출산	저출산대응기반조성, 저출산 대응 도민홍보	24(8.30%)	289(100.0%)
기타	행정경비	29,000(100.0)	29,000(100.0%)
전체		73,109(5.89%)	1,240,168(100.0)

자료 : 전라북도 2011년 세입세출예산서 재분석

▶ 낮은 자체 사업예산은 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수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자체 복지 사업을 추진할 만큼의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함.

Chapter 2

2011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불균형

▶ 전라북도는 높은 복지수요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재정에 투입된 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정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복지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발생.

지역별 복지수요와 재정자립도를 교차시켜보면, 전라북도는 전남과 함께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수요는 전남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재정의 특성상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대응투자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표-4〉 지역별 사회복지예산 및 수요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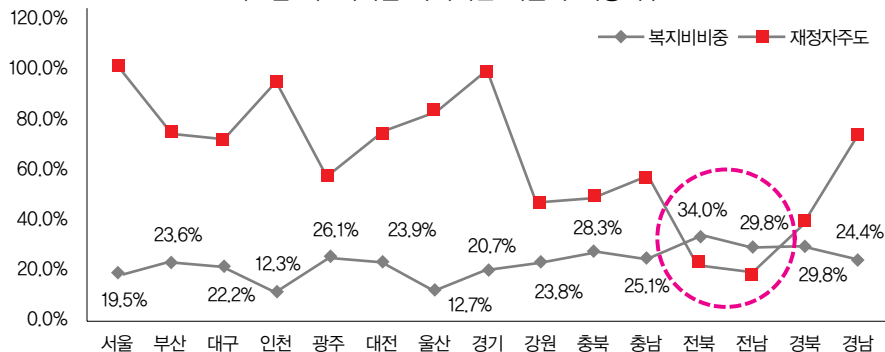
	2010년 총예산 (A)	2010년 총사회 복지예산 (B)	총예산 대비비율 (C= B/A)	총사회 복지 수요자 (D= a+b+c)	2010년 전체 인구 (E)	기초 생활 수급자 (a)	노인 인구 (b)	장애인 인구 (c)	보육 아동 (d)	사회복지 수요자비율 F=E/D	재정 자립도
서울	21,257,300	4,510,978	21.2	1,746,134	10,208,302	215,016	935,757	401,638	193,723	17.1	85.8
부산	7,850,178	1,964,216	25.0	757,986	3,543,030	144,860	381,771	168,493	62,862	21.4	57.6
대구	5,210,140	1,216,970	23.4	521,292	2,489,781	107,918	242,364	113,509	57,501	20.9	56.3
인천	7,107,645	906,505	12.8	484,183	2,710,579	73,055	225,683	126,878	58,567	17.9	70.4
광주	2,852,954	831,206	29.1	301,401	1,433,640	65,487	124,083	66,191	45,640	21.0	47.5
대전	2,685,327	680,233	25.3	280,178	1,484,180	48,633	124,520	68,884	38,141	18.9	56.3
울산	2,171,933	389,223	17.9	98,007	1,114,866	19,393	7,330	47,210	24,074	8.8	67.2
경기	13,185,648	2,967,349	22.5	1,938,004	11,460,610	212,037	965,172	477,021	283,774	16.9	72.7
강원	3,332,500	751,678	22.6	419,369	1,512,870	66,973	217,230	97,604	37,562	27.7	27.1
충북	2,842,295	772,312	27.2	390,135	1,527,478	58,505	198,115	90,958	42,557	25.5	33.7
충남	3,923,540	999,055	25.5	553,866	2,037,582	74,780	301,248	125,556	52,282	27.2	36.6
전북	3,748,134	1,255,213	33.5	577,890	1,854,508	113,782	277,682	130,807	55,619	31.2	24.6
전남	5,204,634	1,398,462	26.9	649,865	1,913,004	110,725	343,861	144,039	51,240	33.9	20.6
경북	5,140,500	1,498,289	29.1	766,539	2,669,876	125,702	412,228	164,885	63,724	28.7	29.3
경남	5,617,073	1,487,668	26.5	744,665	3,250,176	107,294	377,987	175,198	84,186	22.9	42.9
제주	2,749,784	439,703	16.0	145,352	562,663	24,373	66,706	30,676	23,597	25.8	26.1

자료: 노인인구는 2010년 도정통계(2009. 12. 31)/장애인인구는 보건복지부 2010년 등록 장애인현황(2009.12.31)/기초생활수급자현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0) ,2009. 12. 31/총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및 비율은 지방재정연감 2010년 본예산기준

16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인데 반하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4.6%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음.

전국 평균 복지수요자의 비율은 22.9%인데 반하여 전라북도의 복지수요자 비율은 31.2%로 8.3%p 높음.

〈그림-2〉 지역별 복지예산 비율과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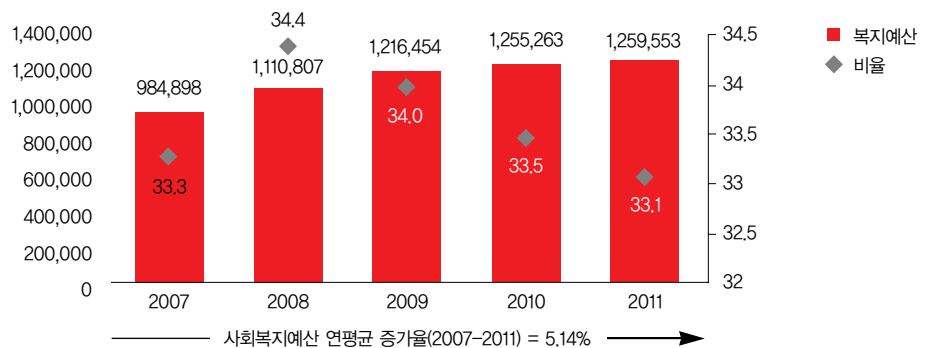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인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의 복지수요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음.

2. 복지재정의 증가와 지방세수의 감소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은 이명박 정부 이후 다소 증가폭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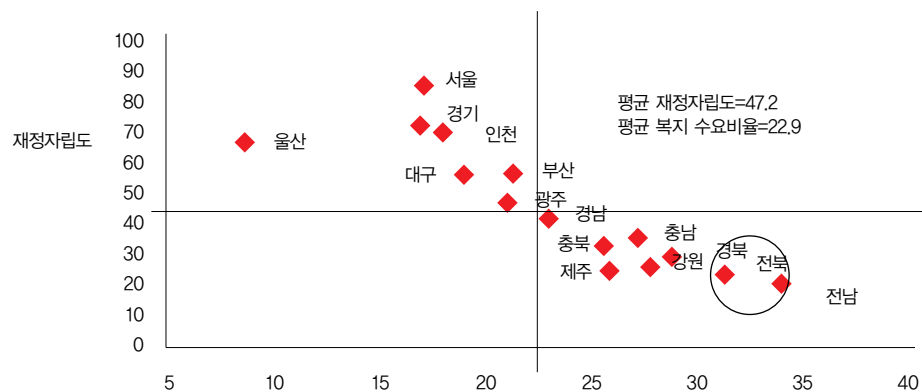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은 2007년 984,898백만원에서 2011년 1,259,553백만원으로 연평균 5.14% 씩 증가.

〈그림-3〉 연도별 복지예산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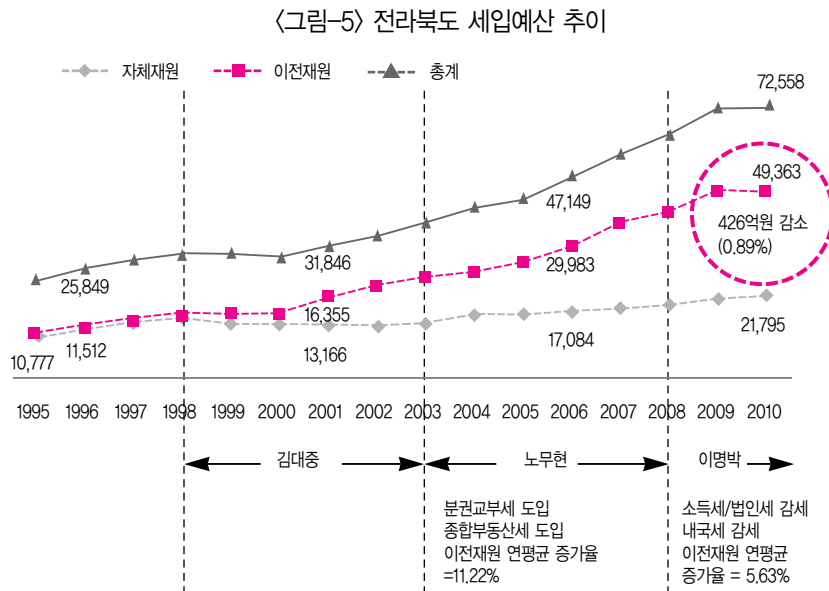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

〈그림-4〉 지역별 복지수요와 재정자립도



▶ 노무현 정부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던 이전재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소 주춤하고 있고,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426억원(0.89%) 감소함.



▶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그 재원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의 세수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내국세를 인하하여 지방으로 교부되는 이전재원의 세수입 약 30조 감소.

- 이명박 정부의 내국세 감면과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로 인해 전라북도의 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63%에 불과함.
- 노무현 정부의 재임기의 이전재원 연평균 증가율이 11.22%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이전재원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Chapter 3

전라북도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

1.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개선을 위한 지역간 연대

▶ 전라북도 사회복지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지역별 차등보조

지원이 재정자주도 80%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14개 시군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전라북도의 경우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차등보조적용 최소 재정기준인 80%미만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역별 재정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보조 적용 기준인 사회복지사업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 1인당 복지수혜율로 조정해야 함.

▶ 차등보조율 개선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낮은 광역도를 중심으로 지역간 연대와 이를 통한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방식의 개선을 유인해야 함.

2. 아동청소년 및 중고령층 중심 탈빈곤정책 확대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예산 중 50%이상이 저소득빈곤계층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빈곤인구의 감소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표-5〉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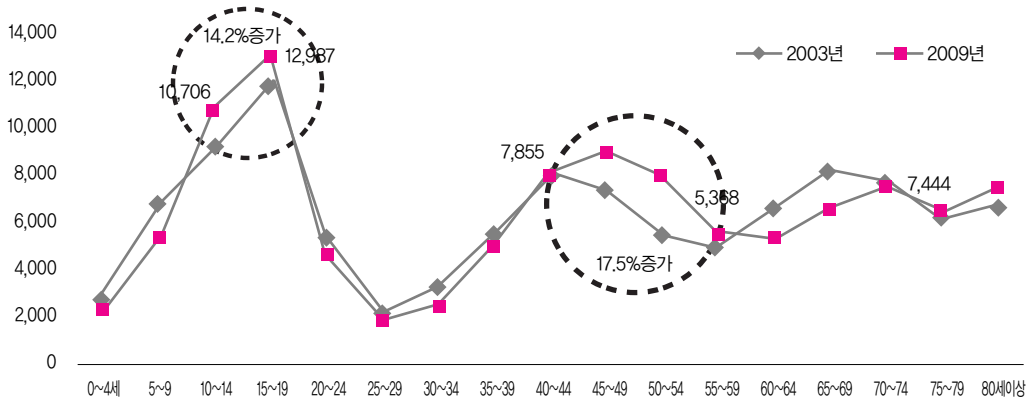
	시(중도시)	군(소도시)	구(대도시)
기초생활수급자	×	- (*)	- (*)
재정자립도	×	×	×
지방세부담액	×	×	×
사회복지증감율	+ (***)	×	×
복지재정분권실시	×	×	×
지방선거실시	×	×	×
소속정당	×	×	×
무소속	×	×	×
한나라당	×	×	×
민주당	×	×	×
adjusted R2	.123	.045	.110

자료 : 모지환 · 이중섭(2010).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7(4)

▶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시부보다는 군부의 경우 빈곤인구의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함.

▶ 전라북도의 연령대별 빈곤실태를 보면, 5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빈곤인구는 2003년에 비해서 2009년 현재 14.2% 증가하였고, 40세에서 60세까지의 중고령층의 빈곤율도 같은 기간 17.5%나 증가하여, 이 연령계층에 대한 탈빈곤정책이 시급함.

〈그림-6〉 연령별 기초생활급자 추이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투명화와 간소화

▶ 전라북도 2011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간접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847억 정도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비로 지원되고 있는 기능보강 예산만 올해 90억에 이릅니다.

〈표-6〉 전라북도 2011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항 목	총 액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86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60
보훈시설 확충	200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3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547
보육시설 기능보강	3,658
노인시설 기능보강	3,390
전체	8,972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제도 개선, 사회복지유관기간 및 시설간 중복기능 통합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소규모화 등을 추진해야 함.

▶ 특히 사회복지시설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경우, 공개입찰에 의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시공사의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 2007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즉시 위원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실비 보상 등) 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200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Chapter 4

결론


- ▶ 전라북도도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기능보강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해야 함.
- ▶ 전라북도의 향후 복지재정은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합리한 재정투자를 효율화하고,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긴요한 곳에 지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재편해야 함.¹⁾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정도에 따라 자체수입의 비중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자체수입에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재정교부금 등을 합산한 자주재원의 비율로 산정되는 재정자립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별 국고보조 차등보조 적용기준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아닌 재정자립도를 활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2010년 재정자립도는 68.9%로 제주와 전남에 이어 가장 낮고, 재정자립도도 24.6%로 전남 20.6%이어서 가장 낮다.

- ➡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의 세 가지 문제에 대응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대안이 이행되어야 함.
- ➡ 높은 복지수요에 대응해서는 대부분의 복지재정 지출요인인 빈곤인구, 특히 아동빈곤과 중고령 빈곤층의 자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탈빈곤 인센티브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표-7〉 사회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높은 복지수요		복지재정 불균형		지방세수의 감소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기초생활수급자	3.2%	6.1%				
장애인인구	4.9%	7.1%				
노인인구	10.5%	15.0%				
보육아동	2.4%	3.0%				
복지수요자비율			22.9%	31.2%		
복지예산비율			24.0%	33.5%		
재정자립도					47.2%	24.6%
1인당 세출액					2,283천원	1,389천원
1인당 자체수입액					983천원	300천원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아동 및 중고령층 탈빈곤 확대 • 탈빈곤 유인시 개인별 인센티브 추진 • 빈곤계층 취업, 창업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 전면재검토 • 차등보조 적용기준 세분화(재정자주도 80%미만 세분화) •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소규모화 추진으로 간접비 최소화 •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운영비 절감 • 기능보강사업 투명성재고를 통한 예산 효율화 	

- ➡ 아울러 중고령 빈곤층의 취업 및 창업관련 욕구와 시장수요를 파악해 틈새시장에 저소득 빈곤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복지재정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차등보조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타시도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 마지막으로 지방세수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전달체계의 간소화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비 등의 투명성 재고를 통한 예산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해야 함. 

〈참고문헌〉

모지환·이중섭(2010).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7(4)
 보건복지부(2010).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20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전라북도(2011). 2011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서.
 전라북도(2010). 도정통계
 행정안전부(2010). 지방재정연감